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검 토 보 고 서

<제163회 임시회>

2007. 11. 5

달 성 군 의 회
전문위원 김 정 현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발의연월일 : 2007년 10월 24일
2. 발 의 자 : 정명자 의원 외 1인
3. 검토 일자 : 2007년 10월 26일 ~ 10월 29일
4. 개정 이유

-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함에 있어 민간위원의 비율 및 심사에 필요한 기준을 구체화하여 공무국외여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5. 주요내용은

가. 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범위(안 제4조)

- 심사위원회는 6인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위원 비율이 3분의 1이상이어야 함.

나. 심사기준 마련(안 제5조)

- 단순시찰·견학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여행 억제
- 필수인원으로 한정 및 개인별 임무 부여
-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산정 등

다. 위원회의 회의록 및 여행보고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안 제6조)

라. 여행계획서 및 보고서 제출(안 제8조, 제9조)

- 출국 전 15일, 귀국 후 30일 이내 작성 제출

6. 관련근거

-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표준안
(행정자치부, 2006. 11. 7)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최근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하여 언론·시민 단체 등에서 본래의 연수 목적에 맞지 않는 관광성 외유문제를 지적하고 있어 이에 지방의회에서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표준안」에 의거하여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 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민간위원의 참여비율 규정 및 구체적인 심사기준의 마련으로 공무국외여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적정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자료>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중 개정규칙표준안 (2006. 11. 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공무국외여행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4.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 하는 경우
5. 기타 지방의회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 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은 당해 지방의회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공무국외여행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허가권자는 소속 지방의회의원 및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시·도(○○시·군·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시·도의회 9인(시·군·구 의회는 6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심사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여행의 필요성 및 여행자의 적합성
2. 여행국과 여행기관의 타당성

3. 여행기간의 타당성 및 여행경비의 적정성

⑤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이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공무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허가권자가 정한다.

제5조(심사기준)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하는 필요한 기준은 다음의 각항과 같다.

①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단순 시찰·견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은 억제되어야 한다.

②여행인원은 여행목적에 맞는 필수인원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여행인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개인별 임무를 부여하는 등 경제성 있고 조직적인 국외여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여행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하고 부수적인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이상으로 방문국과 방문기관을 추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방문지역의 사정, 방문국의 관습·공휴일 관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방문시기를 선택하되, 의원 임기 중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⑤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여행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 ①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또는 의사담당관 등)이 된다.

③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도(○○시·군·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여행계획서 제출)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출국 15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여행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여행보고서 제출) ①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사후관리 등) 허가권자는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1. 여행개요

여행목적							
여행동기 및 배경							
여행기간	. . . ~ . . . (일간)						
여행국							
여행자	소속	직급	성명	성별	연령	여행경비	
						금액	부담기관
	계		명			천원	

2. 여행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 무 내 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 여행자 개인별 업무 내용

연 번	소 속	직 급	성 명	업 무 내 용

※ 2인이상 동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업무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여행경비

성명	계	채재비			항공운임	준비금	기타
		일비	식비	숙박비			
계							

4. 여행효과

[별지 제2호 서식]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작성요령

1. 보고서 규격 및 분량

- 보고서의 규격은 A4(210mm × 297mm) 양면에 워드프로세서 또는 인쇄형태로 작성 및 좌철을 원칙으로 하고, 분량은 20쪽 이상이어야 함.

2. 보고서 구성형식

- 보고서는 논문형식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조식으로 할 수 있으며, 쪽수 표시는 하단중앙에 함.

<목차 구성 예시>

- I. (서론부분) : 여행의 배경 및 여행세부내용 등
II. (본론부분) : 주요업무수행사항 및 관련정보·분석내용 등
III. (결론부분) : 주요 내용 요지 및 건의사항 등
IV.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저자·서명·출판사·출판년도·
총면수

- 보고서의 맨 첫 장(겉표지)에는 제목·제출연월·소속의회를, 둘째 장(속표지)에는 여행국·여행목적·여행기간·보고서작성자 및 여행자 인적사항을, 셋째 장에 목차를 기재

(1) 겉표지 예시

<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여행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

(2) 속표지 예시

공무국외여행 개요

1. 여 행 국 :
2. 여행목적 :
3. 여행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여행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

소속위원회	성 명	비 고

3. 작성시 참고사항

- 보고서는 최신 정보·기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보고내용의 활용방안, 유사목적으로 여행하게 될 여행자를 위한 조언, 기타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그 활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통계·법령·문헌 등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
- 동일한 목적으로 2인 이상의 여행자가 단체로 여행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보고 책임자로 하여 합동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출연월일 : 2007년 10월 22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주민생활지원과)
3. 검토 일자 : 2007년 10월 26일 ~ 10월 29일
4. 개정 이유

- 달성군 장애인 재활자립장의 소재지 변경 및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같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설의 종류를 변경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 생활을 영유시키고 나아가 장애인의 자활과 자립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5. 주요내용은

가. 재활자립장 “소재지” 변경(안 제2조)

- “현풍면 성하리 229-1” 에서 “논공읍 남리 717-4”로 변경

나. 시설의 종류 변경(안 제3조)

- “장애인 보호작업시설” 을 “장애인 근로작업시설”로 변경

6.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58조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 달성군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은 최초 설치시(2003. 2. 10)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장애인 보호작업시설’로 규정되었던 바 국비 등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2007. 10월 현재 근로작업시설 조건을 갖추게 됨에 따라 그 종류를 상위법에서 규정한 시설로 변경하고, 재활자립작업장의 소재지가 논공읍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지역 장애인들의 직업재활훈련을 돕고 이를 통한 고용기회 증대로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지며, 아울러 각종사업 수행시 보조금 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적절한 개정안으로 여겨집니다.

관 계 법 령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 ①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생활시설 :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여가 활동과 사회참여 활동 등에 편의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관·의료재활시설·체육시설·수련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등의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4.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 장애인이 필요한 치료·상담·훈련 등 편의를 제공받고 그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시설 운영자에게 납부하여 운영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3]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제32조관련)

구 분	시설의 종류 및 기능
1. 장애인생활시설	<p>가.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 장애유형이 같거나 또는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그들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의료·교육·직업·심리·사회등 재활서비스와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p> <p>나. 중증장애인요양시설 :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항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입소하게 하여 상담·치료 또는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p> <p>다. 장애영유아생활시설 : 6세미만의 장애영유아를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보호함과 동시에 그 재활에 필요한 의료·교육·심리·사회등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p>
2.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p>가.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교육·직업·의료재활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시설</p> <p>나. 장애인의료재활시설 :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p> <p>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p> <p>라. 장애인단기보호시설 : 장애인을 일정기간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p> <p>마.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스스로 사회적응이 곤란한 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전문인력에 의한 지도와 보호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내 소규모 주거시설</p> <p>바. 장애인체육시설 : 장애인의 체력증진 또는 신체기능회복활동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p> <p>사. 장애인수련시설 : 장애인의 문화·취미·오락활동등을 통한 심신수련을 조장·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p> <p>아. 장애인심부름센터 :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한 직장 출·퇴근 및 외출보조 기타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p> <p>자. 수화통역센터 :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p>

	<p>수화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p> <p>차. 점자도서관 : 시각장애인에게 점자간행물 및 녹음서를 열람하게 하는 시설</p> <p>카.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간행물 및 녹음서를 출판하는 시설</p>
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p>가. 장애인작업활동시설 : 작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주기능으로 작업활동·일상생활훈련등을 제공하여 기초작업능력을 습득시키고, 부기능으로 작업평가 및 사회적응훈련등을 실시하는 시설</p> <p>나. 장애인보호작업시설 :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주기능으로 직업훈련 및 일거리등을 제공하여 보호적 조건에서 생산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고, 부기능으로 직업알선등을 실시하는 시설</p> <p>다. 장애인근로작업시설 : 직업능력은 있으나 사회적 제약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주기능으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생산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부기능으로 직업알선 등을 실시하는 시설</p> <p>라. 장애인직업훈련시설 :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주기능으로 직업평가·사회적응훈련 및 직업훈련등을 일정기간 실시하여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부기능으로 직업알선 및 사후 지도등을 실시하는 시설</p> <p>마.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주기능으로 장애인생산품의 판매활동 및 유통을 대행하고, 부기능으로 장애인생산품에 관한 상담·홍보·판로개척 및 정보제공 등을 실시하는 시설</p>
4. 장애인유료복지시설	<p>장애인생활시설로서 장애인에게 필요한 치료, 상담, 훈련 등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p>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출연월일 : 2007년 10월 22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청소위생과)
3. 검토 일자 : 2007년 10월 26일 ~ 10월 29일
4. 개정 이유

○ 30만m²이상의 택지 등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가 납부한 금액으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을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함.

5. 주요내용은

- 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안 제7조)
- 나. 폐기물 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의 세입규정 신설(안 제8조)
- 다. 폐기물 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의 세출규정 신설(안 제9조)

6. 관련법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 30만㎡이상의 택지 등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가 납부한 금액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을 설치·운영하여 왔으나, 보다 효율적인 납부금 관리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을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로 전환하여 설치·운영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 폐기물 설치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지매입비, 이자수입 등의 세입사항과 이에 따른 필요한 세출사항을 특별회계로 관리함으로써 예산외의 기금으로 운용되는 것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여겨지며, 적정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관 계 법 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관리시설의 설치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받은 금액을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소정의 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신설 2004.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할 금액의 산정방법·납부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3>